

금남로에서



장 필 수
논설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잠시 개헌론이 정국을 흔들었다. 지난 6일 “조기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 도화선이 됐다. 기다렸다는 듯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 후보들이 호응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를 낱인 7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계엄 요건 강화와 5·18 광주정신 전문을 수록하는 부분적 개헌은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느닷없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개헌 정국은 ‘3일 천하’로 끝났다. 우의장이 한 권한대행의 월권을 핑계로 대선 이후에 개헌 논의를 이어가자고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지만 내란 중식이 먼저라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쟁의 도구가 된 개헌

개헌 논의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활화산이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의원내각제로 할 것이냐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최근 여론조사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갤럽이 4월 8~9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에 달했다. 권력구조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1%가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했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가 62%로 ‘5년 단임제’ (33%)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광주시민

은펜칼럼



임 명 재
약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를 검색해봤다. 민주주의 지수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매년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 정도를 평가한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점 10점 만점 중에서 8.03점으로 16위 였다. 이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그룹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7.75점에 ‘결합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그룹으로 분석되었고 순위는 32위로 추락하였다. 아시아에서 대만과 일본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유지되었으나 우리나라만 추락한 것이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던 윤석열씨가 어퍼컷을 날리면서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영업은커녕 우리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공근탑을 어퍼컷을 날려서 깨뜨려 버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온갖 분야에서 반민주적 행태와 반역사적 인물들에 의해 농단 되어 퇴보했던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가 경쟁력이 역시 시민의 힘과 민주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기 고



황 옥 주
수필가

육신의 시작과 끝은 내 의지 밖이라 내 것이 아니다. 생선도 지수화풍의 조화요 소멸도 지수화풍의 조화다. 왔으면 가야하는 여려여거(如來如去)。하느님도 부처도 생겨난 대로 받아들이고 언제 떠날줄 불잡지 않는다. 효성(孝聲) 장정식님이 이승을 떠나셨다. 새 봄 꽃들이 화홍유육(花紅柳綠=꽃은 붉고 버들은 푸름)의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장문 한 번 마음대로 열어보지 못한 무병의 끝이다. 이승은 곧 꽃 향이 남칠 터인데 저승에서 두들기 필가?

나와 그의 인연은 초탈(楚達)의 길에 들어서서서의 희미한 인연까지를 이으면 삼십 년은 넘었다. 그간의 정겨웠던 사연들을 다 풀어 놓을 수는 없음이 아쉽다. 한 국수필문학회, 작가회, 광주문단, 광주수필문학회와

6·3 조기 대선의 최대 화두 ‘개헌론’

들의 개헌 찬성율은 이보다 더 높다. 윤석열정권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광주시민 44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가 개헌에 찬성했고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가 56.6%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지지 정당별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도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한국갤럽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층의 70%가 개헌에 찬성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6%)보다 높았는데 이는 지난 1월 22~23일 엠베레인퍼블릭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54%)의 찬성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층(30%)보다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그 사이 이재명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정당 지지층의 개헌 선호도가 달라진 것이 원인이다.

개헌론은 입장에 따라 변해 왔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돼 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탄핵 대선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임기 단축형 개헌을 내세웠다. 하지만 5월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당선된 후 이듬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다수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태도를 바꿔 단체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개헌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년 중임제와 함께 여야 합 의시 임기 1년 단축안을 제안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년 중임제에 반대하며 개헌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런 윤석열이 12·3일 비상계엄으로 파면 위기에 몰리자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개헌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6월 3일 21대 조기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도 개헌

은 뜨거운 감자다. 각자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정쟁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선 당을 떠나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하자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후보에게 개헌 반대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민주당 내 김동연 후보조차 “내란 종식(프레임)으로 개헌을 댔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속셈은 뻔하다.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형국에서 이재명이 남아야 할 마지막 허들이 개헌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찬성 여론이 많은 만큼 이재명에게 ‘당선을 목전에 두자 5년 임기에 목을 매고 있다’며 개헌 반대 프레임을 씌워야 자신들에게 이득임을 안다.

이재명의 마지막 허들

어찌 됐든 개헌은 이재명에게 남은 마지막 허들이다. 조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주자들의 개헌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후보는 어떤 형태로든 개헌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내란 종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70%에 가까운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답하는 것도 대선 주자의 의무 가운데 하나다.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를 제안했던 것으로 볼때 이 후보의 권력구조 개편안은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임기 문제일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이 당선되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도 임기 단축이 힘든 이 후보를 겨냥하는 말이다.

이 후보를 둘러싸고 사방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아니라 사면개가(四面改歌)다. 오탁이 이재명이 마지막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 관심이다.

자랑스럽다 ‘대~한국인’

대한민국의 놀라운 힘은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나온다. 정말 경이롭지 않을 수 없다. 시골벽척하고 정신없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 대해 실망스러운 말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 역시 대단한 국민적인 힘이 바탕이 되어서 하는 말일 것이다.

멀리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우리는 의병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이겨냈다. 왜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일본은 왕이 죽으면 국가의 운명은 그 즉시 사라지고 그 국가의 시민들은 하루 아침에 점령군의 국민으로 당연히 살아가는데, 왜 조선은 왕이 피난을 가고 군대의 조직도 대부분 와해 되었는데 어찌자고 전국에서 의병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파죽지세의 왜군은 손쉽게 조선을 점령할 것 같았지만 결국 7년 동안 해마다가 그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권력이 바뀌었다. 이는 한반도를 대규모로 침략했던 대다수의 침략국가의 말로와 동일한 결말이었다.

우리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도 시대만 달라졌을 뿐 대한국인의 DNA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무능력한 지도자를 선택해서 불어닥친 IMF 환란에서 우리는 금을 모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는가. 다분히 금이라면 여성분들의 귀금속이고 그 값 비싸고 사연 가득한 보물을 어떤 이유로 서슴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그러한 위기라면 오히려 사재기를 해야하고 가치가 오를 금불이를 더 손에 쥐고 있게 인간의 욕심일 것인데 말이다.

우리는 외국의 눈에 아시아에서 완벽한 민주주의를

갖춘 나라로 평가받았었는데 과연 그 정도의 민주주의를 갖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바쳤었는가. 독재와 군사정권에 맞서서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있었다. 5·18 광주민주화쟁이가말로 임진왜란에서 의병들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시민들이 민주화를 지켜낸 사례다. 그 후로도 우리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기어코 지켜왔다. 보수의 탈을 쓴 반민주적인 정권들이 자리를 잡는 기간이 있었다. 퇴행과 혼란이 벌어지고 그 만큼 힘들었지만 그 또한 우리는 뒷걸음질 친 만큼 더 활력있게 뛰어 오르는 자력을 보여왔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천안공노할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지만 슬리퍼를 신고 뛰쳐나온 시민, 장갑차를 막아선 청년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밤새도록 민주주의의 횃불을 밝힌 과거의 의병들 현재의 민주시민들이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권력은 단합된 민중이 바꾸고 민족과 국가의 혁신은 한영의 리더가 일으킨다. 우리는 민주권력으로 교체해야할 책임이 발생했다. 윤석열씨를 통해 우리는 국가경영에 대해 경험도 없고 자기 철학과 비전도 없이 이 미지만 있는 후보를 선택한 대가를 똑똑히 치렀다. 두 번 다시 감정적이고 막연한 기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의 일생을 살펴보고 그가 품고 있는 구체적인 국가경영 계획서를 보고 투표를 해야할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쿠데타 세력을 물리친 대한민국인이여 6월 3일 대선에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민주주의의 성역을 건축합시다.

어느 죽음의 추모

유네스코광주회장으로 활동하실 때도 나는 늘 곁에 있었다.

평소에 아주 건강했던 그는 등산을 즐기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하산 길에 넘어져 대퇴골이 다치고부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다. 더러 통장관리도 내게 맡기고 개인 오피스텔 열쇠도 주셨다. 사람이 사람의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더 없는 축복이다. 그 대가는 의리고 신의다.

운구가 떠나던 날, 두암동 성당 장례미사에 참여해 성체를 받고 화장장으로 따라 갔다. 형식적으로 육신의 형체가 바뀌고 혼과 백이 영별하는 곳이다. 백은 혼의 집이다. 백이 타버리면 닛의 집은 사라진다. 남은 자들이 아무리 통곡하고 불러도 혼이 돌아올 체(體)가 없으니 초혼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허공을 맴돌 고혼생각에 비감이 스쳐, 물젖은 동자를 남들이 불세라 고 개를 숙였다. 그분 생각때문 만은 아니다. 머잖은 날의 내 미래 모습이 겹쳐져 떠올라서다.

유골을 따라 담양 가톨릭공원으로 향하는데 만감이 착잡했다. 새로 지어진 납골당 6층 작은 한 칸에 유골을 안치한 모습을 멍하니 쳐다봤다. 백 년을 지향했던 한 사람의 혼이 머뭇 공간이 이리도 좁고 초라해야하는

가? 별 것도 아닌 삶의 끝이 허무하고 속절없다. 납골함 문이 닫히자 이승에서의 연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

그의 죽음으로 인정은 조석변이고 믿음이란 한갓 물거품 같다는 것을 통감했다. 친구도 동료도 선후배도 살아있을 때 이웃이다. 재상 개가 죽으면 문전이 성시지만 막상 재상이 죽으면 발길이 끊긴다는 말이 어찌 그리 생각의 정맥을 찌르고 있는지. 오래전, 어느 신문에 텔마 톰슨의 ‘빛나는 성벽’이란 글의 한 대목이 실린적 있었다. 신문 스크랩에 담아 놓고 간간히 읽어본다.

“서러워 마라. 세상은 어차피 혼자서 가는 것이다. 삶의 비탈길에 넘어져 울어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선 내 아픈 눈물 받아줄 가슴도 없고 내 슬픔 닦아 줄 포근한 손길도 없다. 오로지 나 혼자 감수해야 할 나의 몫이다. 꽃이 활짝 필 땐 구름떼처럼 모여들던 사람들도 꽃이 지는 계절이면 아무리 예뻐던 꽃밭도 한순간에 발길을 끊어버린다. 그제 사람이고 사람 사는 세상이다.” 백 년 옴은 말인 것 같다.

흔히 생은 괴롭고 열반은 즐겁다 한다. 기왕에 오탁 약세를 넘었으니 정도의 효상님이 이승에서보다 평온하시길 본다.

社 說

세월호 11주기… ‘안전 대한민국’ 요원하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외부 충돌이 아닌 선체 결함 탓으로 결정났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길에 오른 고교생 등 304명의 목숨을 앗아 간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 복원력 부족, 화물 과적,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침몰의 직접 원인으로 거론됐던 급변침은 조타수의 실수가 아니라 조타기 고장으로 판단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중개축과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화물을 2배 이상 과적해 복원력을 잃은 것이 침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선체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침몰 의혹에 대해서는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외부충돌설을 배제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결론은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원인고 같다. 참사 원인이 나왔으니 더 이상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음모론이 끊이지 않은 배경에 정부의 책임 회피와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행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란 당연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다보니 세월호 이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

354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179명이 숨진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안전 대한민국’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월호와 제주항공 등 대형 참사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지역민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한다. 사고를 통해 배우는 것이 없다면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할 수 없다. 더 이상 예기치 못한 대형 참사로 이웃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개교 무산 전남 국립의대, 최우선 대선 공약

전남 도민들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야심차게 추진해온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여러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1년을 미룬 것이다.

전남 국립 의대 개교 연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정 갈등 해소책으로 의대생들의 정상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도 최근 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의대 신설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립 전남 의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전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남이 뜻을 한 데 모아 오면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금물살을 땀다. 전남지사가 나서 개별적으로 유치 경쟁을 벌이던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합의를 이끌어 내 설립 명분을 쌓고 내년도 의대 증원만 기다리다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의정 갈등 격화로 좌초됐다.

6월 3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전남권에 국립 의대 설립의 명분과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국립 의대 설립을 전남지역 최우선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전남도도 목포·순천 통합 의대 신설과 상급 종합병원 건립을 최근 확정된 대선 공약 과제 만 앞줄에 놓고 후보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다고 하니 지켜 볼 일이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의 전제 조건은 의대 증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교육부를 상대로 한 작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無 等 鼓

백 파이어(Back fire)라고 불리는 ‘맞불’은 불의 진행 방향에 또다른 불을 놓아 가연물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미리 태워 없애는 진화 방법이다. 2013년 미국 애리조나주 야별힐 초대형 산불로 인해 손직한 소방관 19명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온리 더 브레이브’(Only the Brave·2017)에는 화마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맞불 작전의 모습이 자주 나온다. 최정예 엘리트 소방관으로 구성된 ‘핫샷’(Hotshot·산불 발생 초기 방어선 구축에 투입되는 소방대)’팀은 순식간에 몸집을 키우는 대형 산불을 잡기 위해 땅을 파고 나무를 잘라 경계선을 만든 뒤 맞불을 놓아 불을 끄거나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 진화에 힘을 쏟는다.

맞불처럼 공격적이진 않지만 이와 비슷한 화재진압 방식이 방화선(Fire line) 구축이다. 방화선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드는 공터로 산불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는 장벽 역할을 해 자연적으로 불을 꺼지게 하고 이동을 멈추게 한다. 방화선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벌목 도로, 사륜구동

트레일, 보조 도로 또는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모습이 대항산불에 숲이 타들어 가는 모습과 같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 발표로 촉발한 세계 무역전쟁 양상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 산불 같다는 생각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물불 가리지 않는 막가파식 정책이 세계로 퍼져 모든 것을 태워 버릴 기세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

외한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석 달가량 유예하기로 해 합성을 둘러싼 상황이지만, 고율 관세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시간을 번 만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데 남은 기간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국처럼 맞불 작전으로 갈 수 없는 만큼 방화선 구축을 포함해 적절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국내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시점이다.

/김대성 전남 서부·중부·전북 취재부장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예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율 국 222-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